감세추진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 법인세 인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인세율 인하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행 4개(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에서 2개(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가 상승해 이 기간 한국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7개의 감세 조치를 내놨다. 이번 조치로 600억 위안가량(약 10조2420억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강국 도약을 지원해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펑차오빈(馮俏彬) 국가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감세조치의 대부분이 기업의 R&D 지출 확대와 자주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기술 자주권'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리

세계는 지금 감세를 추진하고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감세를 추진해 기업을 뒷받침해주어 기술력확대로 나아갈 여지를 보이고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세금에 따른 국민부담률의 상승률은 다른 OECD국가들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감세를 추진해야한다.